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요약 및 업데이트)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복잡성의 단순화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 간단하게 쓰고 지나간 부분도 사실 자세히 보면 엄청 복잡.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발표의 핵심 요지는 12.3 내란은 87+97 국가체제와 헤게모니의 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헤게모니의 위기에 따른 정치세력 간의 파국적 균형과 격렬한 투쟁이 반드시 내전이나 내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인은 윤석열 개인이다. 이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애초에 그가 집권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고 폭주하게 된 계기는 87+97 국가체제의 위기, 특히 헤게모니의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1. 87+97체제와 헤게모니의 불안정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87+97 국가체제(또는 87 정치체제 + 97 경제체제)는 애초에 불안정했다. 87년 체제는 집합, 대표, 개입 모든 측면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배제적 헤게모니에 기초해 있었다. 더구나 대통령제는 국가 비전/전략 및 사회적 지지의 창출을 대통령 개인의 능력과 카리스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든다. 여당은 대통령을 통제하기 보다 대통령에 통제 당하고, 제한된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의 맥락에서 지역간 연합에 의한 정권 창출, 그리고 대기업과 중산층 중심의 성장주의 전략은 확장적 헤게모니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87+97체제에서는 확장적 헤게모니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개발이 대체적으로 힘들다. 이 문제는 3김이라는 영웅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더욱더 심각해졌다. 이에 더해 97년 IMF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화는 국가체제의 배제성을 더욱더 심화시켰다. 그 결과로 추진된 노동을 배제한 '두 국민' 전략에 바탕한 그 헤게모니는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다. 정권 초기의 높은 지지와 '열망', 그리고 정권 말기의 매우 낮은 지지와 '실망'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87+97체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모순 심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 노동,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외집단이 크게 늘어났다. 즉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청년, 여성, 노인, 지역은 소외되었다. 불안정하나마 헤게모니 블록을 형성해 왔던 87+97체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2008년 일어난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는 바로 그러한 위기의 초기 증상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크게 대인 이명박 정부는 반대세력을 탄압하면서도 소외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2. 헤게모니의 위기

1) 박근혜 정부와 보수의 헤게모니 상실

2012년 대선은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모순 심화와 87+97체제의 무능력을 배경으로 경제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확대를 주요한 이슈로 등장시켰다. 박근혜는 처음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경제민주주의를

내걸고 이들 중 상당수를 헤게모니적으로 포섭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것 외에는 기대를 저버리고 국가체제와 헤게모니의 위기에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소외집단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지지를 약화시켰다. 박근혜는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여당을 통제하려 했고, 이에 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은 위축되었다. 그러나 ‘공천 파동’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를 초래했다. 이제 다음 정권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보수세력 내부에서 분열이 벌어졌다. 보수 언론이 등을 돌렸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슈화되었으며, 대규모 촛불시위가 발생했다. 민주화 이후 최대의 정치 위기 속에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탄핵 요구에 떠밀렸고 결국 새누리당의 분열로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커지면서 여성과 노인들이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성 대통령임에도 여성의 지지를 얻거나 조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극우보수세력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박근혜 탄핵으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집시켰다. 이에 따라 보수세력은 극우 보수의 색채를 더욱더 강하게 띠기 시작했던 반면 박근혜를 탄핵했던 자유주의 세력은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보수 주류에 재흡수되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보수 세력은 과거부터 누려오던 거의 자연적으로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상실해버렸다. 탄핵과 태극기 집회 옹호 등으로 보수정당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구속되었고 그 밖에도 다수의 재벌총수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재벌도 위상이 추락했다. 한편 태극기 집회의 매체로 SNS가 활용되고 극우보수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보수언론도 그 위상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2) 문재인 정부와 헤게모니 구축의 실패

이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가체제와 새로운 안정된 헤게모니 블록을 조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극우 또는 권위주의의 보수 대 자유주의의 정치지형을 자유주의 보수 대 사회민주주의 진보의 지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내부 및 극우 보수의 저항과 자체적인 역량 부족으로 국가체제의 개혁은 실패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는커녕 재분배 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저항을 통제하지 못했다. 검찰개혁도 제도만 일부 바꾸었을 뿐 성공하지 못했다. 국가체제의 다른 부분은 거의 건들지 못했다. 더구나 조국사태와 미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지지 기반은 와해되어 버렸다. 집권 세력의 주류는 ‘내로남불’과 성범죄 등으로 도덕적 지도력을 잃어 버렸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나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제대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은 광화문 촛불과 서초동 촛불로 양분되어버렸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안 불안정 노동, 청년, 여성은 여전히 국가 내에 제대로 대표되지 않았다. 소외된 노동과 여성은 ‘노동존중’이니 ‘페미니스트’니 하는 말들이 지켜졌다고 느끼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동맹 관계에 있던 정의당과 결정적으로 갈라섰다. 그리고 이 틈에 보수는 민주당을 비난하고 이대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호소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잠재적 파시스트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반문의 영웅이 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은 새롭고 진보적인 (아니면 적어도 자유주의적인) 헤게모니 블록을 안정화하

는데 실패했다. 친문 주류 자유주의 세력의 몰락으로 대선 후보는 비문 비주류이자 포퓰리스트 성향의 이재명에게 돌아갔다. 한편 자연적 헤게모니의 상실 이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없게 된 국민의힘은 박근혜 구속과 처벌의 일등 공신이었던 윤석열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쉽게 넘겨 버렸다. 결국 2022년 대선은 반문 파시스트 윤석열과 비문 포퓰리스트 이재명의 싸움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대남과 노인을, 이재명은 개딸을 동원했다. 중도 안철수와 단일화에 성공한 윤석열이 정의당과 갈라선 이재명을 꺾고 승리했다.

3) 윤석열 정부와 불가능한 헤게모니

윤석열 정부는 애초부터 헤게모니를 건설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수준이 정치적 비전의 수준을 결정한다). 보수정당은 공직이나 챙기고 공천이나 받으면 그만인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으며,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능력도 없었다(대신 윤석열을 지도한 것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천공과 같은 비신, 극우보스 유튜버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었다). 게다가 반골 성향의 윤석열은 야당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대화, 협상, 타협으로서의 정치는 실종됐다. 권력블록과 지지 기반은 확대는커녕 ‘뺄셈의 정치’를 통해 급격히 협소해졌다. 게다가 이러한 헤게모니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여소야대는 집권세력을 초조하게 만들고 정치적 대화와 협상 대신 권위주의적이고 사법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는 언론 장악 시도로 이어졌다. 억압적 국가장치의 전면화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억압 장치에 대한 종속은 파시즘을 포함한 예외국가의 특성이다.

게다가 검사동일체의 조직생활만 한 윤석열은 행정부를 장악하고 운영할 지도력이나 능력이 없었고, 사법주의와 신자유주의 외에는 별다른 국정철학도 없었다. 통치의 공백 속에 집권 1년차부터 이태원 참사,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위기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정부적인 성격이 드러났다. 그것은 영혼(전략과 비전)도 없고 혈액(권력)도 순환되지 않고 껍데기(형식적 관료제)만 남아 버둥거리는 좀비 정부였다.

통치의 무능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낮추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압박과 거부권의 남발은 야당의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켰다. 강하게 몰아붙일 수록 야당의 반격도 강해졌다. 대통령 자신, 그리고 특히 가족의 불법 행위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통치의 무능 때문에 여론도 야당으로 기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4년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극우보수 유튜브의 부정선거론에 포획되어, 부인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여당이 1/3 이상의 의석을 얻었다는 것을 승리처럼 여기는 듯 했다. 보수 내에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여당은 언제나처럼 대통령에 종속되어 있었고 박근혜 때와는 달리 대부분 극우와 기회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윤석열은 한동훈처럼 조금이라도 비판적 의견을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다. 재벌 또한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재벌은 윤석열의 ‘가치외교’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짝소리도 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폭탄주나 마실 뿐이었다. 보수 언론도 윤석열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유튜버들에 보수의 주도권을 빼앗긴 보수언론은 그의 폭주를 제어할 수 없었다. 전통적 보수세력은 헤게모니는커녕 그 비슷한 것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은 궁지에 몰렸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 공격에 민주당도 채상병, 김건희 특검이라

는 맞불을 놓았다. 감사원, 장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도 시도했다. 한편 한동훈계로 인해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도 불확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다. 다음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집어 넣는 데는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야당을 정치적으로도 제압 못하고 법으로도 제압 못하니 윤석열의 관점에서 이제 남은 건 군대뿐이었다. 해계모니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두 가지 뿐이다. 해계모니(동의)를 재조직하거나, 아니면 강제력을 쓰거나. 이러한 경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행령 제정과 독단적 결단을 통한 통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결국 해계모니의 부재와 그 속에서의 권위주의적인 억압적 국가장치의 전면화의 흐름 속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가 시도되었다. 즉 12.3내란은 87+97체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해계모니 위기의 최정점이다. 12.3 내란은 국민주권의 근간인 입법권을 찬탈하려 한 정치적 시도였다.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대체 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으며, 이는 주권적 독재 권력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

3. 12.3 내란

1) 12.3 내란 사건의 성격

윤석열은 검사 시절부터 쿠데타를 언급했으며, 2016년 태극기 집회 이후 성장한 파시스트 세력과 극우 유튜브가 국가 내부로 침투해 그에게 확신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2023년 3월부터 측근들에게 위헌적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11월 24일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비상대책을 지시했으며, 12월 1일 계엄령을 확정했다. 그가 동원한 세력은 충암파, 군부, 국정원, 경찰, 비서실, 보수적 국무위원들로 대부분 공식직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믿을만한 인물들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부분 쉽게 동조했다는 점에서 국가 내부의 반민주적 딥스테이트 또는 병렬 권력 네트워크라고 규정될 수 있는 세력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12월 3일 밤의 계엄령은 민주당의 사전 감지, 시민들의 도움, 평일 밤이라는 시점, 병사들의 소극성으로 인해 국회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내란 세력이 쿠데타를 이어갈 다른 수단을 상실('중과부적')하면서 친위쿠데타는 실패했다. 내란 잔당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지만 친위쿠데타 자체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힘에 대한 최근의 지지 상승이 윤석열과 내란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12.3 내란은 신자유주의 모순 속에서 발생하는 해계모니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극우적 흐름과 자유주의 사이의 대립으로서의 정치위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2.3 내란의 좌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서게 한다(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전세계적 권위주의화의 물결이 더욱더 가속화되었을 것). 탄핵 반대 세력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인 'Stop the Steal'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이 국제적 맥락을 가짐을 보여준다.

2) 내란 수습의 지연과 위기의 계속

다만 내란의 수습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짐에 따라 더 깊은 사회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내란 및 내란 동조세력의 저항이 예상보다 장기화되었으며, 이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의 계엄 옹호, 대통령실 인사들의 국회 증언 불출석 등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탄핵과 달리 계엄령을 기획한 대통령

실 및 국무회의 인사들이 현직에 있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분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박근혜 탄핵 학습의 학습효과, 의원들의 계엄 및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이재명 당선에 대한 두려움, 극우파의 당원 잠식 등이 원인이다. 또한 내란 상황에 대한 법적 공백과 불확정성을 몰사 출신 정치인들이 악용하면서 내란 수습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야당은 내란 및 내란 동조세력을 분열시키는 정치력이 미흡했고, 오히려 이들의 결집을 강화시켰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조급한 태도가 내란/동조세력에게 저항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가는 기존 형태와 사회관계의 제약 속에서 작동하며,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어, 내란 수습의 지연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탄핵과 처벌은 지연되더라도 결국 이루어질 것이나, 이러한 지연이 가져올 결과가 문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환율 급등과 국가신인도 하락 등 국가체제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갈등의 격화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내란 수습의 지연은 국가체제의 위기를 더욱 더 심화시킨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의 저항으로 민주적 대표성이 추락하면서 국가권력의 효과성이 감소하고 외교관계가 곤란해졌으며, 대통령과 총리 탄핵, 주요 장관 구속으로 행정부 내 기능이 상당 부분 공백 상태에 빠진 상태다. 행정부 내부 분열과 삼권분립 체계의 균열로 국가권력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국가의 기능이 탄핵과 내란 수사에 집중하면서 성장 저하, 내수침체, 환율 폭등 등 경제 문제 대응 능력이 약화되었다(예를 들면 외환위기사 달리 스왑이 가능한가? 확신할 수 없다). 만약 IMF급 위기가 다시 터진다면 정치 또한 혼돈에 빠질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내란의 최종진압이 지연되면서 반이재명 정서로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회복되었으며 극우세력이 다시 준동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과정이 순탄하지 않게 되고 계엄 이전의 이른바 '심리적/사법적 내전'과 헤게모니 위기가 종식되지 않고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내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4. 12.3 내란이 던지는 시대적 과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탄핵되고 처벌 받겠지만 내란 동조세력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전략적 선택성(어떤 세력과 전략이 유리한가)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이 구조가 결정하기 보다는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행위가 다른 하나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거나 제약을 풀어주는 투쟁의 상황이다. 내란 동조 세력의 저항은 전략적 선택성이 무엇인가 잘 보여준다.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였던 패배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저항하여 보수 결집을 이루어낸 것이다.

내란의 전과 후는 같을 수 없지만, 내란 수습 방식은 내란의 교훈과 향후 개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단기 수습 시 피상적인 교훈만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의 수습은 극우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의 실행을 어렵게 한다. 다만 아직 희망하기로는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면서 비교적 단기에 수습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개혁은 단기적이고 피상적이 될 전망이 커진다. 즉 표면적인 위기만 해결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 봤듯이 이번 사태는 87+97 국가체제의 위기이자 유기적/헤게모니적 위기이다. 그람시가 말하듯이 '낡은 것은 죽어가고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국면이다. 단순한 적폐 청산과 제도 개혁만으로는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개혁은 근본적인 개혁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니다. 국가 위기와 헤게모니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적 의지를 담은 진보적인 확장적 헤게모니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87+97년 체제의 대표, 집합, 개입 양식 전반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상상력의 진보적 다양성을 허용하는 정치/국가 체제, 물질적 양보가 가능한 경제/산업/고용/복지 체제, 권력 분산화 등이 필요하다. 보수적 정당 체제와 선거 제도 개혁, 극우 보수 대 자유주의 구도에서 자유주의 보수 대 사회적 진보 구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극우 보수의 소멸 또는 정상화와 더불어, 그들이 자라나는 사회적 토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가 체제와 사회적 헤게모니, 세력 균형이 요구된다. 현재의 세력균형상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으나, 국가체제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헤게모니/유기적 위기는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헤게모니적 상상력의 창출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보론〉

윤석열 정부와 파시즘

폴란차스의 파시즘 분석틀에 비추어 볼때 윤석열 정부는 파시즘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파시즘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생겨나며 억압적 국가장치의 우위를 특징으로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파시즘 국가는 억압적 국가장치의 강화와 함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언론 등)의 상대적 자율성 축소가 나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다 셋째, 지배계급의 정치적 붕괴와 노동자계급의 전반적인 무력화도 클래식한 파시즘과 유사하다. 파시스트 세력은 초기에는 외부에서 국가장치를 침투·장악하는데, 극우보수 유튜브가 외부에서 침투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파시즘은 소부르주아를 기반으로 하는데, 불로소득주의, 소유권과 경제적 자유, 능력주의 이데남, 룸펜 등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도 이와 유사하다. 정당의 국가장치 종속도 유사하며, 병렬 권력 네트워크의 존재로 인한 공식권력과 실질 권력의 분리, 친위쿠데타에 의한 권력 장악시도 등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인종주의(북한, 중국혐오), 소수자혐오, 미시파시즘(극우유튜브와 SNS 통한 지지세력 동원), 민병대 동원 등의 관념도 파시즘과 유사하다.

확장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부재와 정치적 상상력의 문제

보수세력이 확장적 헤게모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계급의식과 투쟁의 측면, 북한과의 대치에 따른 불평등 개선 정책에 대한 반감, 미국의 안보지원 등도 큰 요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번역을 통해) 국민적-대중적 이해관계와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능성의 예술로서 정치의 역할이다. 즉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적 상상력은 왜 빈곤한가? 물론 여기서도 반공주의와 북한과의 대립에서 나온 보수세력의 관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중도실용’과 ‘경제민주주의’를 내걸고 집권한 보수에서 이제는 자유주의자들이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열거하자면, 국가체제의 문제가 크다. 대통령제는 상상력(적어도 상상에 대한 선택)을 대통령 개인에게 대부분 위임한다. 대통령의 공직임명권과 공천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유기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정당과 지식인을 기회주의적으로 만든다. 더구나 지역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의회주의 대표양식, 그리고 낡은 지역주의 정치전략은 정치인들이 전국적 단위의 지역을 넘어선 헤게모니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 않게 만든다. 또한 한동안 작동했던 대기업과 중산층 중심의 성장주의도 두 국민 전략을 추진하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지역주의와 중산층 중심 성장주의는 더 이상 집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전

본 발표에서도 내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현 상황을 가리켜 형용사 없이 단순히 ‘내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내전은 계엄선포와 해제로 3시간으로 끝난 것이다. 지금은 불법적 저항은 있어도 내전 상황은 아니다. 심정은 이해하나, ‘내전’이라는 용어에는 다름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진짜 내전과 구별할 수 없다. 둘째, ‘내란’ 세력을 동등한 내전 세력으로 격상시킨다. 셋째, 폭력이 아니라 말과 법에 의거한 싸움을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갈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연결된다. 넷째, ‘내전’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내전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섯째, ‘내전’이라는 담론이 실제 내전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극우보수 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했나?

극우보수 또는 파시스트 세력의 근거지는 잘 알려진 바대로 보수 기독교, 노인, 일베 등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동에서 소외되거나 위기의식을 느낀 집단이다. 보수 기독교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수입된 미국의 문화적 자유주의에 위기의식을 느낀다. 사회적으로 본래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노인들은 극우 정치 집회 참여에서 심리적, 경제적 소득을 얻는다. 일베 또한 상당부분 소외된 청년들이다. 유튜브는 이들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결국 이들이 자라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모순 심화와 그러한 모순의 심화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또는 그것을 이용한) 정치권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헤게모니의 위기, 유기적 위기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과 전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되거나 토론되어야 할 쟁점들 있다.

#1. 12.3 계엄 사태는 보수세력이 내파된 사건. 재건 가능성은 높지 않다.

- 계엄 선포 속보를 보았을 때 실패를 예측한 이유. 국정원.
 - “국정원보다 유튜브를 더 믿었다” / 전직 국정원장 고발. 인사 파동. 국정원장-1,2청장 사실상 경질. 조태용 임명. => 국가기구를 체계적으로 조직할 능력 결여. 고교 동문 수준의 협소한 인맥의 한계.
 - 윤석열의 내파 경력.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검찰/법무부 외압 의혹 제기 => 전통적 의미의 ‘보수’ 세력이 못 됨. 보수세력의 지도자/조직자가 될 수 없었다. 될 의지도, 될 가능성도. 후보 시절 이미 분열.
-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탄핵 당론조차 결정 못하고 한동훈 비롯해 찬성 의원들 배제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 리더십을 작동시킬 수 없는 수준으로 보수 세력이 자기재생산 불가능해진 때문. ‘친윤’은 그 결과. 그러나 관저 앞 방탄의원단은 윤석열의 식사 제안 거절.
- 이는 다행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욱 심대하다는 점을 보여줌. 수습이 신속하고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이유. 주도권은 이미 극우 대중운동에 넘어간 상태.(제도정치를 초과하는 위기라는 점에서 정치제도 개혁만으로 대응 어려움)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로 역사와 정치를 학습한 것에서도 확인되듯. 합리적 보수는 당분간 출현 어렵다.

#2. 극우 대중운동에 의해 보수세력이 재조직되는 중. “이재명은 안 된다”

-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라면 내전의 야전사령관은 전광훈.
 - 광화문 집회에서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조중동 절독하자는 제안까지.
 - 선거부정 주장, 정치/언론 불신 등 신자유주의와 함께(특히 2008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진) 극우 대중운동의 한국적 버전으로 읽어야.
 - 이들이 ‘반공’ 내건다는 이유로 ‘역사전쟁’처럼 접근하는 것(일제 잔재의 뿌리가 남았다거나 ‘반일’이 시대정신인 것처럼 말하는 민주당)은, 문화전쟁이나 가치전쟁의 형태로 신자유주의의 양대 진영이 만들어낸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

- 2000년대 중반부터 ‘뉴라이트’, ‘태극기부대’ 등으로 면면히 이어지던 흐름. 보수 개신교 기반. 반젠더, 반동성애 등과 이미 만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야.
- 22대 총선 자유통일당 2.57% 득표율. 그 한계를 깨는 극우 대중운동의 질적 도약 국면.
- 윤석열(제2의 윤석열 포함)은 트럼프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 파시즘이든 포퓰리즘이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면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물질적 분배에 영향을 미칠 권력이 필요. 미국의 트럼프는, 트럼프라서가 아니라 미국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 관세 부과든,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상대 군사 행동이든, 세계질서에서 미국이 놓인 조건과 권력을 바탕으로 시도할 수 있고 얼마간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한국은 다르다. 트럼프 2기 앞두고 미국의 금리, 무역, 외교, 경제 어떨지 전전긍긍하는 데서도 확인. 북한 공격 유도하는 ‘외환’ 정책과 같은 시도는 미국이 먼저 막아설 것. 미-중 관계가 한반도 분쟁 상황에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 결국 윤석열이든(그는 이미 실패), 또다른 극우/보수 정치지도자든 한국에서 경제위기의 대안이 될 만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 쉽지 않다. 지금 보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도 할 수 있다. 반도체지원특별법 같은. 경제위기의 대안이 못 되는 정책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의 입장에서든 체제 안정 위해 윤석열보다 안전한 선택이 기대될 것. (박근혜 파면 결정이 보호/재확인한 것이 ‘경영상의 자유’였다는 점 상기할 필요)
 - 이는 극우 세력의 소멸 가능성이 아니다. 준동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윤석열의 빠른 체포과 구속/처벌/파면이 중요한 이유.
- 빠른 파면/처벌을 가장 바랄 민주당이 현재의 국면을 교착상태로 만드는 요인이 되는 역설.
 - 계엄 사태 이후 ‘헌정 사상 최초’의 반복. 예산안 의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대행의 대행, 헌직 대통령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 발부 등. 이때마다 정치적 논란과 변곡점 형성. 극우 대중운동은 이 국면을 ‘이재명은 안 된다’로 돌파하는 중. (‘백골단’ 기자회견이 보수 청년들로부터 항의받은 이유)
 -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자초한 논란. 검/경/공수처 권한 논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삭제 오해, 내란특검법 추진과 한계 등이 체포 국면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만 관심 있다는 비난 자초. ‘윤석열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위해 모이는 힘을 교란하는 세력이 되고 있음.

#3. 민주당의 정권교체 기대와 다른 광장의 기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 광장/비상행동이 윤석열 퇴진 운동의 구심/주도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음.
 -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와 다른 조건. 2013년 철도파업, 2014년 세월호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등을 거치며 형성된 흐름과 달리. 지금의 윤석열 퇴진 국면은 민주당이 초반부터 영향력.
 - 박근혜 탄핵 소추까지 국회(여야 막론)를 끌어냈고 이후 주도하고 확장해갔던 것과 달리, 빠른 탄핵 이후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광장의 민주주의가 민주당 또는 정권교체를 초과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퇴진’이라는 공통분모를 강조하며 ‘다른 이야기’ 우려하는 분위기.
- 운동이 직면한 역사적 한계.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들.
 -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태’는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 그런데 왜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사회 또는 운동이 분열을 겪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민주당 친화적/의존적으로 전개되어 온 운동들. 반보수전선의 역사적 결과.
 - 운동이, 지식인들이 민주당 비판하는 것은 흔한 일.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은 ‘더 잘 하지 못했다’에 그침. 즉 사회 문제의 진단이나 해법에서 다른 전망이 없음. 대표적인 것이 ‘검찰 개혁’. 검찰은 왜 개혁되어야 하는가. 최근 김건희 Vs 이재명 구도에서도 확인되듯 검찰개혁의 쟁점은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 분점을 둘러싼 투쟁. 노동자 투쟁을 처벌하거나 젠더폭력 피해자와 정의를 대표하지 못하는 검찰의 문제가 검찰개혁 과제로 이해된 적 있는가. 부패방지 기구로 제안되었던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대안이기는 한가. 이런 질문은 운동 안에서 제대로 등장한 적 없음. 오래된 과제들이 갱신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이어져오며 ‘미완의 민주화’라는 환상을 채우고 있음. 주요 국가기구들이 이미 양당의 정치권력에 분점된 상태라는 점도 기억해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관성적 평가.
 - 그러는 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관철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 심지어 통상 보수 정부가 주도한 폭력적 신자유주의화가 민주당 정부(김대중/노무현)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나은’ 세력. 신자유주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정치의 사법화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도덕화하는 경향. ‘내로남불’의 부메랑.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정치를 도덕화하는 또다른 방식.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하라는 전망/구상 내놓지 못함. 기재부가 개혁 좌초시켰다는 동일한 평가 반복. 심지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사태.

-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펼쳐진 개헌 국면에 대한 평가 역시 ‘개혁의 열망을 받아안지 못했다’. 그러나 운동은 개혁의 열망을 조직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헌에 몰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그걸 넘겨줬다. 광장의 열기는 ‘조문 만들기’에 갇혀 식어갔고 분절화된 운동은 제각각 자신의 개헌안을 로비하느라 바빴고 정작 극우세력이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활용해(NO 성평등 YES 양성평등) 자신의 대중운동을 키운 시간. 지배세력 내부에서 이미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지금, ‘개혁의 열망을 개헌으로 몰아주기’가 운동의 전략일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한 채 반복하는 비판의 한계.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진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재의 위기에 맞지 않음.

#4. 운동의 역사적 한계 속에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야

- 대안적 세력화의 실패 속에서 사회를 놀라게 한 ‘2030 여성’이 등장.
 - 불안정노동, 실질임금 감소, 심각한 가계부채, 재생산의 젠더화 등 현재 체제의 위기를 집약적으로 겪는 집단. 그러므로 이들은 청년이지만 하지 않으며 여성이지만 하지 않는다. 고용불안, 자영업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 빈곤과 자살의 선택지에 놓인 노인, 노동시장 진출의 압박에 놓인 청소년이기도. 이들은 다른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다르게 겪는 것.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 여성이 페미니즘을 경유하며 저항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성차별에 맞선’ 것으로만 읽어낸 운동의 한계이기도. 한편, 비례대표 및 동수제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 구상이 부딪친 한계이기도.
 - ‘개헌’을 검토할 때에도 이 조건에서 출발해야. 세력화의 구상 속에서만 의미 있으나, ‘개헌’ 논의의 역학관계에서 쉽지 않은 조건도 판단해야. (2023년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개헌 주장.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개헌 주장. 대한민국헌정회 개헌 주장. ‘낡았다’, ‘이번이 기회다’ 주장의 반복. 이에 반해 광장/운동에서 개헌을 주도할 세력 구성 어려워. 조국혁신당의 사회권선진국 등 각종

개헌 주장. 그러나 국유화 원칙 수정한 54년 개헌, 이익균점권 삭제한 62년 개헌은 기억되고 있을까.)

- ‘다중 위기’는 가능성의 조건이기도.
 - 차별에 맞서기 시작한 이들이 노동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불안정노동으로 초과착취당하는 이들이 기후정의의 외치기도 어렵지 않은 조건. 지금 광장에서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 운동은 이를 수많은 문제들로 나열하며 불만을 부추기는 역할을 넘어서, ‘연대’를 넘어서 ‘계급-되기/하기’를 도모해야.
 - ‘소수자’의 다수자 되기 과정을 만들어야. 이는 자본주의 성장기의 계급투쟁과 다를 수밖에 없다. 단결이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 단결을 가능하게 할 것. 노동조합은 여전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장소. 지금 노동조합은 ‘노동 있는’ ‘성평등 있는’ ‘기후정의 있는’ 민주주의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운동들이 함께 도전해야 할 과제.
-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한다
 - 불평등에 맞설 대안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지금 광장에서 사람들이 떠올리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국민의힘이 해체되면? 대통령, 정부, 국회의 권한을 조절하면? 법의 지배가 관철되어 검찰/사법부가 정의의 심판자가 되면? 대통령이나 의회가 잘못할 때마다 국민이 직접 끌어낼 수 있게 되면?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어떤 민주주의를 상상해야 하는가.
 - 민주공화국의 조건으로서의 공공성. 주권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민주주의의 출발선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의 원리로서의 기후정의. 노동, 존엄, 돌봄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세력화 나서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고 나아가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

썩은뇌와 싸울 수 있을까

손희정(프로젝트38)

1. '87+97체제'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내란이라는 진단. '87+97체제'의 중요한 성격 중 하나는 자유주의의 외부를 상상할 수 없게 된,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고 계획하는 (대중적,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이는 '배제의 전략' 위에서 자유주의 세력의 주도 위에 세워진 '제도적 민주화'(87)와 IMF 이후의 '급진적 신자유주의화'(97)의 결과이자 조건이며, 정치-경제-문화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
2. 이때 영화전공자로서 떠올리게 되는, 21세기 이후의 '사적복수극'의 인기. <복수는 나의 것>(2002)에서 <추적자>(2012)를 지나 <경이로운 소문1, 2>(2020, 2022) 등 각종 자경단 스토리로 이어지는 사적복수극들. 박찬욱의 <올드보이>(2003)는 87체제의 '호모내셔널리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서사화 했고, 박찬욱의 영화세계에서 이런 구체제에 대한 저항은 아나키스트들의 뭉(<복수는 나의 것>)이었다면, 10년 후인 <추적자>에 이르면 이 땅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투표 혁명'이 된다. (강력한 대권주자의 비위를 폭로하고, 그를 떨어트리기 위해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투표율이 91.4%를 찍는 순간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최후의 정의는 법정에서 구현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에 등장했던 복수의 서사들이 "정치적 기획이 다다른 막다른 골목"에서 "공적 체계에 대한 믿음의 몰락을 반영"(김정선)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준하는 사적 복수에 치중하는 반면, <추적자>는 공적 체계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에 이르러서는 돈이 아-주 많은 독지가만이 이 초능력자들로 이루어진 자경단의 든든한 백이다.
3. '돈이면 다다'와 낯고도 새로운 파시즘 등장의 단단한 기반. (그리고 이 '돈이면 다다'가 결국 '디지털 고어 자본주의',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는 현실과도 연결된다. 여기에서 N번방, 딥페이크, 사이버레카, 여성혐오가 돈이 되고 표가 되는 시장이 열린다.) '억압적 국가장치/국가경찰'로서의 검찰은 물론이고 정치 입문 경로로서의 법조계, 시사 방송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변호사들,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없다는 식의 셀러브리티 법조인에 대한 대중적 선호, 모든 싸움의 결론은 법정에서 날 수밖에 없는 현실 등에서 발견되는 사법의 정치화와 만물의 사법화.
4. 종교나 이데올로기 비평이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주던 시대를 지나 '도파민'이 판단의 (거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시대에 이르러 득세하게 된 음모론. '결론'을 법조 엘리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던 '재판 거래'. 결국 법 역시 '해석'의 영역이 되어버리면서 법으로서 법을 배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서 '적법한 절차'를 무기로 삼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버티기가 가능해진 상황. 그리하여 진보가 시스템을 신뢰하며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보수가 시스템을 전복하려는 기이한 전도가 펼쳐지는 상황. 그리고 "돈이 모든 걸 이긴다"는 감각.
5. '사회 변혁 세력'으로서의 보수'라는 이율배반. 물론 이것은 언어의 탈취일 뿐이지만, 이런 식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반지성주의'를 '반권위주의'로 해석하는 (매노스피어로 대변되는) 온라인의 세계.
6.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깔려있는 억울함의 정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7. “결국 2022년 대선은 반문 파시스트 윤석열과 비문 포퓰리스트 이재명의 싸움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대남과 노인을, 이재명은 개딸을 동원했다. 중도 안철수와 단일화에 성공한 윤석열이 정의당과 갈라선 이재명을 꺾고 승리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 (1) 지금/여기를 결정짓는 조건으로서의 도파민 경제 혹은 중독경제 (2) 민주당은 개딸을 ‘동원’ 했는가 (3) ‘정의당과 갈라졌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8. 하나의 에피소드. 토론자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의 이야기.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을 찍었던 (당시 40대, 현재) 50대 남성은 왜 윤석열의 지지자가 되었고 여전히 윤 탄핵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반기는가.) 2017년 “나는 보수다”, “중국인이 굶는 고기를 먹자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던 (당시 30대, 현재) 40대인 여성은 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 고민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되었는가. 그들이 머무는 ‘세계관’. 플랫폼의 문제와 중독경제의 문제가 놓여있다.
9. 디지털 고어 자본주의의 바탕 역시 중독경제. 주식, 코인, 악플로 추동되는 사이버레카-스피어, 게임, 약탈적 포르노그래피, 불법도박, 사채시장, 마약 등으로 연결된 중독의 네트워크. 여기에서 강조되는 신체성과 안전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의 배제를 ‘정의’로 말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
10. ‘세계관’은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시대의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그 세계관은 극우의 문제만은 아니다. ‘선거부정’이라는 설정의 시작은 김어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음모론, 주목경제에서 중독경제로의 진화, <더 플랜>, ‘노인가설’과 “(내 설명이) 이해 안 가요?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골 못 넣었다고 사과를 요구하진 않는다”는 식의 피의 쉼드. 세계관 장사를 ‘언론’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정치의 ‘대중문화화’와 ‘팬덤 정치’의 문제가 겹쳐져 있다. (팬덤은 우리 시대의 가능성일까, 불가능성일까.)
11. 그리고 2022년 대선. ‘남성연대’ 및 ‘남초 정치’의 말로 - 국회의원 김남국. 그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페미니스트 정치’의 얼굴로 여겨졌던 박지현은 어디에 있고, 그 남성정치의 ‘꼬봉’이었던 김남국은 어디에 있는가.
12. 그래서 우리는 중독경제 속에서 등장한 특정 ‘세계관’에 젖어든 사람들, 그러니까 뇌가 썩은 사람들(brain rot)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혹은 나의 뇌는 괜찮은가.

김정선, 「2000년대 전반기 한국영화의 사적 복수 재현양상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교착: 후근대 나르시시즘적 윤리의식과 그 파국적 가능성」,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손희정, 「디지털 시대, 고어 남성성의 등장 - 사이버 레커와 디지털 여성살인」, 허운 외,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한겨레출판, 2024.

토론문

한재헌(동국대학교)

■ 인터레그넘?

- 대표의 위기, (동시) 우경화(관료화), 뉴미디어(정치양극화와 포퓰리즘)
 - 포스트내란 국면의 복잡성
 - 내란 발생의 배경과 과제 / 내란 지속의 조건과 여파 / 내란 저지의 성과와 한계
 - ‘내란’이라는 미증유의 충격 + 극우화 + 불확실성
 - 포스트내란
- => 87년 체제의 보완적 지속가능성
=> ‘문제’로서의 해게모니 위기의 재작동, 재강화

■ 53년체제 + 트럼프 + 지-정-경시대

-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교전국 관계) + 윤의 도발 유도 계획(당황한 미)
 -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농담
 - 주한미군 분담금 폭발 빌미(혹은 철수)
- =>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
=> 자주국방? (민주당의 철학, 언어의 빈곤)
=> 이념 / 진영 간 제로섬적 대결 잠재

■ 포스트내란과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불확실성의 국면
- 장기 정전체제의 (현)법적, 제도적 공백
- 무인기 문제와 정전체제
- 정전체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 기존 정전체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인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인지

■ 두 국가론의 계기와 ‘좋은 분리’의 모색

- 두 국가나 아니냐에서 어떤 두 국가로 평화를 보장할 것인가
- ‘특수관계론’(기본합의서) 자체가 일종의 평화적 두 국가론 (ex. 연락사무소)
- but, 새로운 지정학적 구도와 남북한 국가성 강화에 따라 특수관계에 입각한 민족 내부 교류협력의 의지와 실효성 약화
- 북한의 두 국가론은 “남북관계”(동족관계)가 북한에게 이득이 되는 매개로서 더 기대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
- 또한 교류협력의 확대가 연합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단계적 사고의 내재적 한계
- 기존 남북관계의 ‘회복’과 ‘복원’의 관점을 넘어설 필요
- ‘나쁜 분단’에서 ‘좋은 분리’로 전환하는 계기
- 분리는 나쁜 것, 통합은 좋은 것이 아닌, 좋은 분리, 나쁜 통합도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 반통일, 분단세력)
- 지역 통합 + 한반도 분리 : 남북한 통합-분리의 병행과 공존?

- 남북의 국가성 인정에 관한 법적 위상이 높은 합의(합의서, 선언 => 조약)
- but, 두 국가 관계 =>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조 확보 문제

■ 우파 결집의 조건

- 민주당 리스크

ex. 이재명(사법, 캐릭터), 무원칙, 당파적 조급성, 카톡고발, 정쟁화 자초, 결단주의의 공유

- 탄핵심판, 내란수사 절차 법리 논란(외환죄 추가 포함) 여진 장기화 가능성

- 불확실성에 대처할 철학과 언어의 부재(기능주의적 남북관계 패러다임)

=>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 담론과 민주당의 촛불연대 전유 => 검찰력 비대화 =>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광범위한 합의 지대 필요

=> 내란/극우의 정동을 고립시키는 국가적 퍼포먼스 필요

■ 표층과 심층

- 포스트내란 국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적 긴장(과제, 정치지형)

- 표피적 봉합과 심층적 극복 사이의 긴장

- 심층적 위기: 인과적 구조의 직관성 결여(당위론을 넘어서 내란 극복의 과제와 어떻게 연결?)

- “~만으로는 부족하다”, “~을 넘어서”

=> 분리된 과제라는 느낌. 계기/매개/개입의 공간의 발견과 창출(광장의 경험)

=> 결국 개헌문제(플랫폼)로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87년의 교훈)

지주형 선생님의 정세 분석에 대체로 동의하며, 여기에 몇가지 보태려고 한다.

우선, 현재가 어쨌든 탄핵을 인용할 거고, 그러면 이후 민간인 신분이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해 사법처리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희망 수준에 남기면 좋겠다.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면, 빠르게 요동치는 정치 국면에서 탄핵 불인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윤석열 체포, 탄핵, 처벌을 넘어서 반민주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정치적 시도가 사회에 착근 불가능하도록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현재 내란 수괴이고 파시스트 우익 세력의 구심점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윤석열이 헤게모니 리더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윤석열이 체포, 탄핵, 처벌된다고 해서 우익 파시스트 세력이 균열을 일으키고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극우 유투버, 전광훈 등은 윤석열과 무관하게 윤석열 당선 이전부터 다중위기 시기 자기 생존과 자기 이익 추구 방식으로 약육강식, 혐오와 배제 방식을 동원해 왔다.

그들은 홍준표, 윤상현, 오세훈 등을 제2, 제3의 숙주, 윤석열로 삼으면서 파시스트 질서와 이익구조를 확장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군산복합체 산업으로, 원전산업으로, 제약산업으로, 투기적 토건과 금융 산업으로, 반환경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윤석열에 광적으로 자기 동일화 하면서 윤석열을 몸을 던져 사수하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건 극우라서가 아니라 광적 팬덤이라서 그런 것이고, 다른 정치 집단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국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국가 이데올로그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결코 윤석열에 올인하지 않을 것이고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가지 트랙은 탄핵 인용을 저지해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건은 사실상 윤을 내세운 내란 성공이고, 윤석열과 극우 세력이 원원하는 결과다.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위헌적 계엄선포와 내란시도, 그리고 지금도 자기방어를 위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통치권을 재장악하면 사실상 통치방식은 이전보다 더 반헌정적, 반민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반독재 항쟁과 내전의 시간이 된다. 어찌되었든 반지성주의 무리정도로 취급 받던 내란 선동·동조세력이 실제 국가권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트랙은 적절한 시기에 자신들이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다.

어차피 윤석열이 더 이상 기존 민주정이든 새로운 민주정이든 어떤 민주정과도 공존할 수 없

기 때문에, 극우 파시스트들이 적어도 통치 논리로서 민주주의 기표를 버리지 않는다면 (democradura, 저강도 민주주의 등) 그들은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서 자신들이 먼저 윤석열을 버릴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주의를 유보하면서 반공친미 노선을 걸으려는 이승만식 세력과 그래도 민족적 민주주의/한국적 민주주의를 동원하면서 (결국 유신독재로 가게되는) 절차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려는 세력들로 분열될 수 있다. 여기에는 2022년 과도기의 매개물이었던 윤석열을 대체할 새로운 숙주, 새로운 아이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떻게 갑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빌런이 될지는 이젠 예측하기가 힘들다.

탄핵반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탄핵/퇴진 세력을 ‘친중 종북 동성애 간첩 집단’이라는 기이한 기표로 왜곡하는 극우 세력은 반공 파시스트 체제로서의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점점 더 내세우게 된다. 그들이 광장과 일상 곳곳에서 저지르는 차별, 혐오, 테러, 거짓 선동과 같은 반지성주의 행위는 그들 스스로에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장 지성적이고 성스러운 실천으로 해석될 것이다.

지금 국면에서 이 극우 파시스트 세력은 설령 국가권력을 탈환·장악하는데는 국면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반지성·반공이라는 안티테제 중심의 취약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보수 이데올로기로 업그레이드되고 사신들이 새로운 보수로 제도 정치 공간에서 민주적 경쟁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시간이다.

윤석열 체포와 탄핵이 빠를수록 저들의 세력화 기회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속도는 현재제 아래서의 대선 국면을 빠르게 끌어오면서, 지금 정치 국면이 새로운 공화국 수립, 혹은 기존 보수 양당 중심의 과두제와 신자유주의 관료제(신관료적 권위주의)를 넘어설 정치적 실천 기회 또한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보수적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12.3 이후 열린 탈구적 국면, 인터레그넘의 시기에서 극우 파시스트 집단이 자신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동혁명, 극우 헤게모니 전술에 대한 것이다. 과거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구호 속에서 진보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중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독자적 정치세력화’ 구호와 실천은 어떤 집단도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 대항, 대안 헤게모니 투쟁, 진지전 구축, 담론 투쟁은 누구나 활용하는 기본 정치 전략이다.

그렇다면, 탄핵, 퇴진, 새 공화국 세력은 어떤가? 이들은 혹은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따로 또 같이 상태이다. 서로 다른, 때로는 충돌해온 정체성 집단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자각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내란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중심으로 따로 또 같이 간다. 그러나, 아직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방식과 앤딩 스토리가 정치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서로 다른 정치 전술을 공론장에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가고 있다.

당연한 과정이면서도, ‘우리’ 또한 따로 또 같이가 투 트랙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구체제로 통합되든, 현재 방식으로 조기 대선을 치루든, 개헌 국면으로 들어가는 내란 세력을 민주정치 공간에서 철저히 제거하는 트랙과 함께, 개헌을 적절한 시기에 현실화시키고 새로운 공화정의 내용을 채울 트랙으로 가야한다. 이것은 기존 현재의 과두제를 깨뜨릴 때 사실상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두제를 깨는 것, 광장이 열린 이 예외 상태에서 과두제를 깨는 것은 극우 파시스트와 정반대 축에서 그리고 정반대인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 결사체, 정치적 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지주형. “12.3 내란과 국가체계의 위기” 토론메모

0. 序

- 범람하는 정치평론 <=> 장기구조적 분석/개안
- 대부분에 동의. 아마도 강조점의 차이.
- 尹정부 탄생의 기원 & “처단”이후의 관점
- 이론적 자원: Cas Mudde & Fareed Zakaria
- 키워드: 포퓰리즘, 정치 양극화, 부정적 당파성, 부족주의, 비자유 민주주의

1. Populism이라는 쟁점

- 2010년대 중반 이후 정치학의 큰 화두
- 한국에도 적용: 정치갈등의 전반적 질저하(“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치열한 사생결단식 정치. 내용물은 부재. 현 역사국면의 중요한 구조적 배경 형성.
- 한국 민주당 & 미국 공화당의 평행성

(1) 문재인 정부/이재명/민주당에 대한 해석: 자유주의 세력?

- 포퓰리즘/비자유적 민주주의 기원은 이재명이 아닌 문재인 정권기
- “진보적 자유주의 개혁”의 실패로 포퓰리즘 도래?
<=> 文 & 李의 연속성
-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 ①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세계관: 한국의 Trumpism
 - > 선악구도 & 딥스테이트론: 검찰공화국, 토착왜구, 기레기...
 - > 음모론의 범람: 부정선거, 세월호 외력침몰...
 - > 외부 운동세력에 의한 정당의 포획: 문빠(티파티) -> 개딸(MAGA)
 - > 구조적 개혁의 문제의식 소멸: 적폐청산론 => “처단”의 정치학 기원
 - > 강력한 대중동원/대중독재 상황 ex) 문자폭탄
 - > Illiberal Democracy: “국민/당원의 명령”, “법치”부정

=> 자유주의적 법치의 형해화: “검수완박”의 효과 =>尹의 탄생 & 공수처의 무능

-尹이전은 돌아가야 할 태평성대X. 자유주의의 진보화란 목표 불가능

② Issues

- 조국사태: “내로남불”? 우유부단? <=> 신자유주의 문화적 자본축적
- 심상정 독자노선?(조국편지) <=> 20년/50년 장기집권을 이야기하다 왜 5년만에 박빙승부?

(2) “내란의 여진”이 지속되는 이유

- 마찬가지로 정서적 양극화, 부정적 당파성에 의존하는 우파세력
- 반민주/반이재명 정서(=부족주의)에 기반해 충분히 방어가능
ex) 윤상현(1년만 버티면...), 국힘/윤 지지율 반등
- 전형적인 진영론 작동
->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부족논리만 작동 cf) 조국, 박원순
- 운동정치(=태극기)에 의한 정당 포획
- negative feedback loop 완성: 문제의 본질(헤게모니/유기적 위기)은 사라지고 악다구니같은 패싸움만 존재

(3) “응원봉”세력의 해석문제: “더쿠” 인상비평

- 아직 경험적 증거(survey, FGI)는 없으나...
- 역시 선악구도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배제의 에너지로 동원/집결
-> 응원봉 = TERF = 개딸의 오버랩
-> 트젠(퀴어)/2찍/토착왜구/수박에 대한 혐오
- 이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Populist Feminism?
- “처단”의 정치학 지속 + 여기에 극우화된 국힘세력 저항
-> vetocracy 강화 & 위기의 장기지속?

cf) 비자유주의적 접근(militant democracy)의 사례: 국힘의 위헌정당해산? 테러방지법에 입각한 카톡검열?

2. 윤석열=파시즘? (보론파트)

- Q: 이토록 무능한 파시스트 국가가 존재가능한가?
- “좀비”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는 없음
- 파시즘의 핵심: “대중독재”(임지현) - 헤게모니/카리스마 모두 부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맹점

- 친위쿠데타 유니버스의 중요한 요소로서 북한-공산전체주의 세력
 - >尹의 “내우외환” 스토리의 주인공: 국내의 반국가세력 & 국외의 “외환유치” 대상
- 80년대 사구체 논쟁의 문제의식에서는 중요한 요소: 민주혁명기지? 분단체제?
- 오늘날 국가론 논의에서는 망실, 주변화
- “처단”이후의 남북관계?
 - > 新냉전시대 도래: 기성 NL적-햇볕정책적 접근의 불가능성
 - > 두 주권국가의 평화공존가능성? 비핵화 의제 포기?